

임예진 관세법(2026년 대비) 개정사항 (1)

- 관세법 2025. 12. 23. 개정 [시행 2026. 1. 2.]
- 관세법 시행령 2025. 12. 30. 개정 [시행 2026. 1. 2.]
- 관세법 시행규칙 2026. 1. 2. 개정 [시행 2026. 1. 2.]

* 전체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 ‘기획재정부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

기획재정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령

(개정된 부분에 대한 비교표는 별도로 첨부한 파일 참조)

p.17 : 법 제8조 제3항 ③ 수정

③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개정 전	개정 후
③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p.33 : 법 제19조 제5항 ① ㉞ 수정

㉞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개정 전	개정 후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금액을 수령한 경우

p.122 : 법 제42조의2 제1항 ⑦ 신설 (기존의 ⑦, ⑧은 ⑧, ⑨로 변경)

* 법 제42조 제1항 ①의 금액을 감면하는 경우

- ⑤ 법 제37조 제1항 제3호(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 ⑥ 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 ⑦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⑦에 따른 기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⑩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 ⑦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 ⑩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p.161 : 영 제68조 제1항 수정

제1항 수출자의 서면제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61조 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서면으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p.171 박스 : 영 제71조의2, 영 제71조의3, 규칙 제20조의2 전체 수정

법 제56조의2 제1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영 제71조의2]

제1항. 경미한 변경행위 등

법 제5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①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 제3호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

제2항. 경미한 변경행위 등 여부 판단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등”이라 한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규칙 제20조의2]

제1항. 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

영 제71조의2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①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①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과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 ②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법 제84조 제3호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 ③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 ④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 ⑤ 영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⑥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단순조립가공행위의 판단

영 제71조의2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②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①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
- ②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된 제품(이하 이 조에서 “단순조립가공물품”이라 한다)의 가격 중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 ③ 단순조립가공물품의 가격 중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 ④ 제3국 내 단순조립가공물품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 및 기간
- ⑤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이후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제3국 수출량
- ⑥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영 제71조의3]

법 제56조의2 제1항 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경미한 변경행위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p.175 : 영 제71조의7 제3항, 제5항 수정

제3항 조사기간 연장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1개월의 범위에서	2개월의 범위에서

제5항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 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71조의5 제3항 전단 및 영 제71조의6 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0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8개월 이내에	9개월 이내에
9개월 이내에	10개월 이내에

p.176 : 영 제71조의9 제1항 수정

제1항 준용규정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공급자”는 “공급자(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는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는 “제1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은 “의견”으로 보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는 “진술 또는 협의가”로 본다.

p.197 : 영 제81조 제1항 수정

제1항 수출자의 서면제출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서면으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p.273 박스 : 규칙 제35조 제1항 ② 수정

- ②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개정 전	개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p.273 : 법 제89조 제3항 수정

제3항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제조·수리 공장)의 지정기간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p.274 : 법 제89조 제6항 ① 수정 및 표 삭제

-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개정 전	개정 후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p.278, 279 박스 : 규칙 제37조 제2항 ⑤, ㉓, ㉔, ㉕ 수정

- ⑤ 수출조합전시관(산업통상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
- ㉓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
- 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 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p.281 : 법 제91조 ⑤ 신설 (기존의 ⑤는 ⑥으로 변경)

- ④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⑤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 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p.284 : 법 제93조 ⑩ 신설

- 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p.290 박스 : 규칙 제46조 제4항 ③ ㉞ 수정

- ㉞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

개정 전	개정 후
통계청장	국가데이터처장

p.331 : 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수정

제2항 중복조사 금지

세관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법 제1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교부된 조사 대상(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통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대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개정 전	개정 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법 제1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교부된 조사 대상(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통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대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p.333 : 법 제114조 제1항 본문 수정

제1항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세관공무원은 법 제110조 제2항(납세자 권리현장 교부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법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또는 법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법 제131조 제2호 전단과 법 제132조 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전	개정 후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0일[법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또는 법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법 제131조 제2호 전단과 법 제132조 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p.334 : 법 제114조 제3항, 제4항 신설

제3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제1항 제2호(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4항 변경에 대한 서면통지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338 : 법 제116조 제1항 ④ 수정

④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전	개정 후
통계청장	국가데이터처장

p.405 : 법 제137조의2 제1항 ㉡, ㉢, ㉣ 수정

㉡ 법 제234조의2에 따른 마약류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개정 전	개정 후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 법 제234조의2에 따른 마약류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p.469 : 영 제189조 ③ 수정

-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이하 이 호에서 “위험물품”이라 한다)을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개정 전	개정 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등

p.488 박스 : 영 제203조 제5항 수정

제5항. 작업완료 결과통보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5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p.488 : 법 제188조 단서 수정

법 제188조 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으로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개정 전	개정 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다만,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으로 생긴 제품 중

p.489 : 법 제189조 제1항 수정

제1항 원료과세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법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법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p.512 : 영 제192조의10 제2항 ② 수정

- ②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자 각 1명

개정 전	개정 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

p.545 박스 : 영 제226조 제3항 ④ 수정

- ④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개정 전	개정 후
④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④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p.547 : 법 제216조 제3항 수정

제3항 운송수단

법 제213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법 제213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법 제213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p.582 : 법 제234조의2 수정

법 제234조의2 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전	개정 후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p.588 : 법 제235조의2 신설

법 제235조의2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법 제235조 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① 법 제235조 제1항 ①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

p.596 박스 : 규칙 제77조의4 제1항 ②, 제2항 수정

제1항. 임명하는 위원

영 제245조의2 제3항 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

- 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2항. 위촉하는 위원

영 제245조의2 제3항 ② ⑦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p.625 : 법 제254조의2 제3항 수정 및 단서 신설

제3항 실제 배송지의 제출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법 제 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649 : 법 제264조의10 제1항 본문, ② 수정 및 ③ 신설

제1항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 ②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
- ③ ① 및 ②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개정 전	개정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② ①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②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
<신설>	③ ① 및 ②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p.650 : 법 제264조의11 제목, 제1항 수정

법 제264조의11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1항 마약류등 관련 정보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마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 ③ 마약류등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개정 전	개정 후
마약류	마약류등

p.651 : 법 제265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법 제265조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제1항 물품,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 휴대품에 대한 검색

세관공무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 ① 법 제137조의2 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 ② 법 제206조 제1항 ② ㉟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제3항 신체 검색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 ① 마약류등
-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 ③ 그 밖에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4항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

p.655 : 법 제266조의2 제1항 수정

제1항 마약류등 위치정보 수집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마약류	마약류등